

대선 앞두고 포퓰리즘 기승, 지역화폐 퍼주기에 혈세 줄줄

24개 지자체 중 232곳서 지역화폐 발행... 4년 사이 네 배 늘어난 산업별 매출액 달라... 슈퍼마켓 늘고 음식료·소매업은 제자리 전문가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지역마다 차등지원 필요"

〈1면에서 계속〉 전 국민에게서 걷은 세금 4000원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화폐 발행 지역으로 이전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원래 지역화폐 지원 분담비율은 6(국비) 대 4(지자체)였으나 내년부터 4대 6으로 조정되면서 지자체 부담이 더 커졌다.

문제는 지자체들이 지역화폐 재원을 스스로 마련하기보다는 국고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이다. 이에 따라 예산 지원도 해마다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8년 100억원이었던 지역화폐 국가보조금 금액은 2019년 884억원, 2020년 6689억원, 2021년 1조2522억원 등으로 증가했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도 같은 기간 1000억원, 2조3000억원, 9조6000억원, 20조2000억원 등으로 늘었다. 이 기간 누적 국고지원 비율은 6.3%에 달했다. 지역화폐 10만원을 구입하면 이중 6300원을 지원했던 셈이다.

이렇다보니 지자체들은 '너도나도'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분위기다. 다른 지역 주민들이 낸 세금을 자신의 지역으로 손쉽게 끌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지역화폐 발행 지자체는 232곳이다. 4년간 2017년 56곳, 2018년 66곳, 2019년 177곳, 2020년 229곳으로 크게 늘었다. 세금으로 지역화폐 지원을 급격하게 늘린 정부가 자초한 현상이었다.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해 지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결제수단을 말한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지역민이 10% 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일반발행과 청년수당, 산후조리비, 재난지원금 등 복지수당으로 지급하는 정책발행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이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법정화폐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전통시장, 식당, 편의점 등 소상공인 업종으로 사용처가 제한되고 세금, 등록금으로 낼 수도 없다. 사용 기간도 한시적이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화폐보다는 일종의 상품권으로 보기도 한다.

"지역 매출 증가하면 인접 지자체 매출 감소하는 것"

지역화폐에 나랏돈이 투입됐지만 정작 그 효과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지역화폐 도입으로 예측되는 경제적 효과는 △대형마트로부터 지역 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소매점으로 매출이 이전되는 효과 △지역 내 소비자들의 지출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해 지역 내 소매점의 매출을 인상시키는 효과 등이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역화폐를 도입한 배경이기도 하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연초 발간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지역화폐 효과에 대해 "소비의 역외유출을 막아 지역 내 소매업 매출이 증가한다면 이는 동시에 동일한 금액만큼 인접 지자체의 소매업 매출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즉, 지역화폐 도입으로 역외유출 방지를 통한 지역 내 소매업 매출 증가는 인접 지자체의 동일한 규모만큼의 매출액 감소를 대가로 하고 있다는 얘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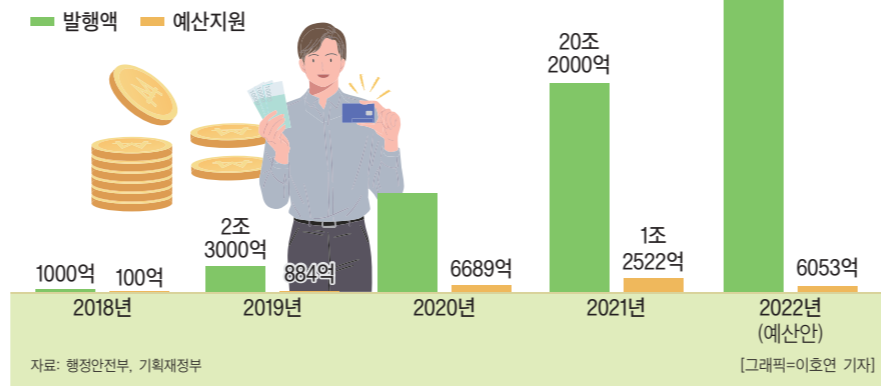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의 역외유출을 막으면 인접한 지자체가 매출 감소의 타격을 받게 되고 이에 대응해 인접 지자체도 지역화폐를 도입하는 게 유리한 전략이 되므로 결과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각각 지역화폐를 도입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장기적으로 모든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를 도입할 경우 소비의 역외유출을 차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사라지고 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한 발행비용의 증가, 소비자 후생 감소와 같은 비효율성만 남게 된다.

송경호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이러한 결과는 지역화폐의 도입이 정책적으로 의도하지 않았던 효과"면서 "일반적으로 재정상황이 열악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소규모 지자체는 지역화폐 발행 규모와 할인율에서 불리한 여건에 있으므로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도입함으로써 오히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화폐 발행이 소매업 전체의 매출을

광역지자체 지역화폐 발행 현황 (단위: 원)



지역화폐 발행·지원예산 규모 (단위: 원)



증가시킨다는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 해당 소상공인들이 속해 있는 산업군에 따라 정책의 효과가 매우 이질적으로 나타났다. 지역화폐 발행의 혜택이 일부 업종에 집중됐다는 분석이다. 송 부연구위원은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체 비율이 높은 슈퍼마켓, 음식료품소매업, 연료소매업, 음식점업의 경우로 한정해도 정책의 효과는 이질적이었다"며 "곧 슈퍼마켓과 식료품점의 경우 지역화폐 도입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고 반면 음식료품소매업과 연료소매업은 동일하게 지역화폐 가맹 비중이 높은 산업군임에도 불구하고 매출 증대 효과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

다"고 말했다. 지역화폐를 도입한 정책적 목표 차원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모든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함으로써 사라지고 오히려 재정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지자체는 매출 감소의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 송 부연구위원은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 내 소상공인 전체의 매출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시킨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며 "현재는 중앙정부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의 경제 규모, 재정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발행을 보조하고 있는데 발행수수료, 판매대행수수료 등의 제반비용은 별도로 지자체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연초 발간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지역화폐 효과에 대해 "소비의 역외유출을 막아 지역 내 소매업 매출이 증가한다면 이는 동시에 동일한 금액만큼 인접 지자체의 소매업 매출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서울 소재 재래시장 내의 한산한 모습. 박미나 기자

부담하고 있어 재정여건이 양호한 지자체가 더 대규모로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는 부유한 지자체의 지역민과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존재한다"며 "중앙정부는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연의 취지를 고려해 지자체 경제여건에 따른 차등지원을 고려해봐야 하고 대도시에도 이와 같은 지원이 필요한 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정책 목표인 '소상공인 보호'에 대해서 지역 내 대형마트의 매출을 소형마트로 이전시키는 효과는 나타났지만 이는 기존의 온누리상품권으로도 달성할 수

있는 효과라고 지적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인접 지자체의 경제 규모에 따른 외부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발행주체가 일원화되어 더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송 부연구위원은 "현재는 지역화폐와 비교해 온누리상품권의 가맹 대상 업종의 다양성이 낮게 나타나지만 가맹 대상 업종과 규모, 할인율을 지역화폐에 준하는 수준으로 적용하는 중앙정부의 조치는 손쉽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며 "중앙정부는 온누리상품권의 대략적인 업종과 할인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업종별 할인율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도록 하는 탄력적 운영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윤승준 기자

한국거래소, 31일 휴장 뒤 1월3일 10시 재개장

한국거래소가 31일을 연말 휴장일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증권·파생상품시장은 30일까지 운영하고 2022년 정규시장은 1월 3일 오전 10시에 개장한다. 거래소에 따르면 12월말을 결산배당기준일로 정한 상장법인의 배당락일은 29일이다. 28일까지 해당 기업 주식을 사면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장외파생상품 CCP청산

및 TR보고 업무는 연말 휴장일 없이 정상 운영된다. 2022년 연초 개장일에는 증시 개장식이 열리기 때문에 매매거래시간이 임시 변경된다. 개장일의 증권·파생상품시장 정규시장은 1시간 연기해 10시에 개장되며 종료시각은 현행과 동일하다. 기초자산조기인 수도부거래(미국달러선물), 미국달러플렉

스 선물 등 일부 파생상품시장 및 일반상품시장은 개장시간이 10시 10분이거나 거래시간 변동이 없다. 같은 날 금융투자협회(금투협)는 31일 한국거래소 휴장에 따라 국내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 펀드 환매 일정이 순연된다고 밝혔다. 국내 주식형·주식혼합형 펀드 투자자가 27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 신청

하면 28일 공식 기준가격으로 30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는다. 같은 날 오후 3시 30분을 지나서 신청하면 '장 마감 후 거래제도(Late Trading)'에 따라 29일 공식 기준가격으로 30일에 지급받게 된다. 국내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펀드의 영업일은 '거래소의 개장' 여부를 기준으로 하므로 올해 거래소 휴장일인 31일은 비영업일로 처리된다. 다만 거래소 휴장일에도 판매사 창구는 정상 운영되기 때문에 펀드의 판매·환매 청구는 가능하다. 윤승준 기자